

미래산업에 강원도 자연환경 활용

강원일보 오피니언

무더위와 장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의 여름도 이제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연의 순환에는 고즈넉이 그 자리를 가을로 넘기고 있다.

그냥 조금 더워지는 게 아니다. 지구열화(Global heating)라는 용광로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이러한 열화는 지속될 듯하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보다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높아지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전 지구적 환경재앙이 온다는 종말론적 예언까지 등장했다. 자연이 더 이상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그 自然(스스로 그렇다)이 아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도 국비 9조5,000억원을 따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제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는 오히려 올해 국비 확보액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약 5,000억원 증액에 성공했으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예산의 경우, 정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7%나 깎이는 와중에 강원자치도는 이러한 연구개발 및 산업지원기술 분야 예산을 오히려 증액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반도체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12억원이 최초로 투입된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역시 내년 국비 반영에 성공했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AI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차세대 반도체의 고성능 소모품을 실제 장착해 성능을 테스트하는 매우 중요하고 확장성이 다양한 일종의 틈새 기술시장이다.

뜨거워져 가는 지구환경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전 세계적 기술전쟁 속에서 강원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내년도 재정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시에 관련 조직 정비와 더불어 특례법을 준비하고 규제 철폐 등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도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런 한편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 강원자치도가 ‘특별하게 살기좋은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들 속에는 강원도가 직면한 급격한 인구소멸도 있을 것이고, 열악한 기업환경과 인적자원 문제도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 경쟁과 그 모든 것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자치도의 고민이 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필자는 그 고민의 중심에 강원도만의 자연환경이 자리해야 한다고 감히 제안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청정환경과 삼림자원, 수자원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산업클러스터를 기획하고 강원도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기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똑같은 4차 산업기술이라도 최종 목표를 강원도만의 친환경이란 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고민이 의료AI 분야와 실증센터에도 담겨야 한다. 그리하여 이 뜨거워지는 지구, 여름 한철 잠깐 지나치는 수많은 관광객이 가까운 미래에 살기 좋은 청정 강원도에 무리지어 살려고 찾아오는 그런 상상 속 그림을 그려본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흡연피해 팽개친 담배성분공개법 10년 표류, 이젠 끝내야

동아일보 오피니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현재는 담배 제조사가 자기 책임하에 한정된 성분만 담배 포장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담배의 성분과 함량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10년간 표류 중인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이 본회의까지 가게 될지 주목된다.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고 발암 물질로 범위를 좁혀도 최소 70종이지만 담배회사들이 공개하는 성분은 8종에 불과하다. 이 중 함량까지 공개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등 2종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100여 개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정부의 담배 유해물질 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셈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해외에서는 제품별로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는 성분을 감추고 있다. 국내 흡연자들만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안의 논의 과정을 돌아보면 담배의 유해성을 알려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2005년 WHO 담배규제협약 가입을 비준하고도 2013년에야 관련 법을 늦장 발의했고 그것도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가운데 누구 소관인지를 놓고 다투느라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 부처는 서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싸우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니 담배회사의 로비설까지 나온 것 아닌가.

정부 추산에 따르면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8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원이 넘는다.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가공식품의 영양 정보와 원재료는 물론이고 화장품도 수십 종의 성분을 모두 깨알같이 공개하는 세상이다.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요인의 정보 공개를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다.

이제라도 기재부가 포기하고 복지부의 법안이 법사위에 오른 만큼 여야는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기 바란다. 정부는 법 통과를 계기로 담배의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 방심위 원스톱 신속심의 및 구제제도 활성화 -
- 방송사의 긴급하고 심각한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적 · 탄력적 제재 추진 -
-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 · 신속 규제체계 마련 협조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 · 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사실상 언론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 방통위는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이하 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 방통위는 우선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한다.
-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
-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또한, 재허가 · 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 ·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한편,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네이버 ·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 · 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여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지자체 대상 정부혁신 컨설팅으로 범정부 혁신성과 창출

- 주요 혁신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과 기관별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 기대 -

- 지속가능한 정부혁신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3년 정부혁신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부혁신 컨설팅은 각 기관이 정부혁신 주요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가 자문이 제공된다.
 - 또한, 행정 전반에 혁신 마인드를 강화하며 타 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도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컨설팅은 크게 ▲정부혁신 실행계획 주요정책 추진지원, ▲정부혁신 역량강화, ▲정부혁신 평가 대응력 향상,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먼저, 정부혁신 실행계획 주요정책 추진지원 컨설팅은 중앙행정기관의 실행계획 중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허청,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예를 들어 행복청 세부과제로, 지역의 교통안전 문제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상시협의체 구축을 지원한다.
 - 세종 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돕는다.
- 2002년 구축 이후 특허청이 20여 년만에 개편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원한다.
 - 정보통신(IT)전문가 자문 제공,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지원 등으로 특허심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시스템 이용 편의와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혁신 역량강화 컨설팅은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 예천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수요에 맞춰 ‘데이터 분야’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관별 현황을 분석·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유사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제안하여 각 기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 특히 데이터 분야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개방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혁신 평가 대응력 향상 컨설팅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컨설팅단과 대상기관 간 일대일 자문을 통해 혁신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을 높인다.
 - 5개 시, 6개 군, 5개 구를 대상으로 2022년 혁신평가 결과를 분석·진단하고, 올해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과 연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이 돋보이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대전광역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부서별 혁신 릴레이 추진(강원 홍천군) 등 우수 혁신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분야별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기관 혁신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부혁신 추진과 평가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 주현 혁신조직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정부혁신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
 -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 (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하였다
 -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약류사범(명): ('22상) 8,575 → ('23상) 10,252 // 압수량(kg): ('22상) 377 → ('23상) 571

○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 이후 : 현황과 과제

 박 노 수 | 서울시립대 교수

01. 들어가며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그간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제도적 재선 요청사항 중 하나였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제가 도입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그 운용을 시작하였음.
-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분립형임을 감안할때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승진, 복무, 후생복지, 교류,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능력이 배가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실상의 보좌인력에 상응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의원2인당 1명의 지원인력이 도입됨으로써 어느정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에 따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0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후의 지방의회 역할의 비교분석

- 지방의회의 역량 비교분석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후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므로 광역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의회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안처리 상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으며, 기초의회는 특례시의회 중 고양특례시 의회의 의안처리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 의회의 의안처리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였고 통계자료는 2014년 제 9대 의회 개원 이후 1년간, 2018년 제 10대의회 개원 이후 1년 2022년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5월 31일까지의 통계자료를 확인하였으며, 그 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의회에 따라 임용시기가 다르며 2022년 7월1일 부터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개원 이후 같은 기간을 설정하여 비교하였음.
- 의회의 공식적인 의안처리 통계 중에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이 있고 집행 기관이나 주민들이 제출하여 행하는 의정활동 분야가 존재함
- 자발적인 의정활동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의회 내에서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안의 발의, 건의안이나 결의안 발의, 집행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질문, 자료요구 등이 있으며 집행기관 등의 제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에는 자치법규의 심의 의결, 예산 안의 확정 및 승인,

• [표1] 의회 의정활동 방식의 범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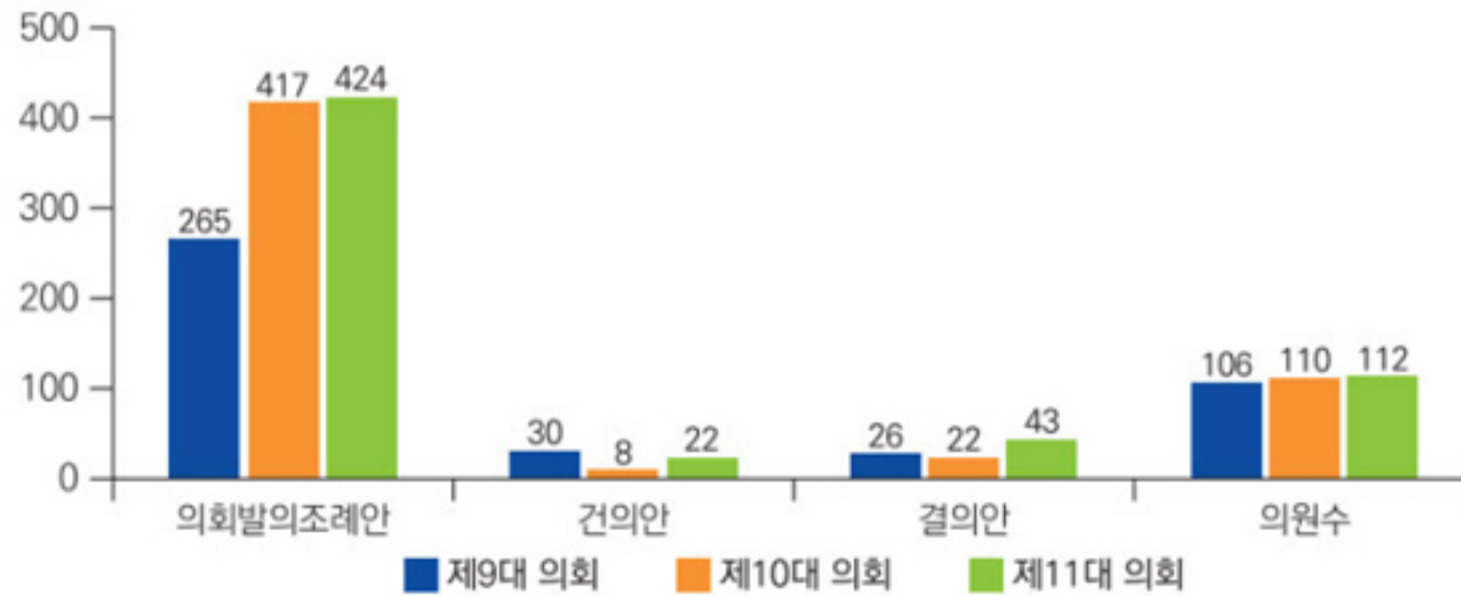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자발적 의정활동	•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의회 내에서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안의 발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발의, 집행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질문, 자료요구 등	
집행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의정활동(교육청 포함)	집행기관	• 자치법규의 심의 의결, 예산 안의 확정 및 승인, 제출된 의안의 동의나 승인, 의견 청취안의 의회의사 결정 등
	주민	• 청원, 주민발의 조례안 등

- 본 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의안처리 통계 중 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의 통계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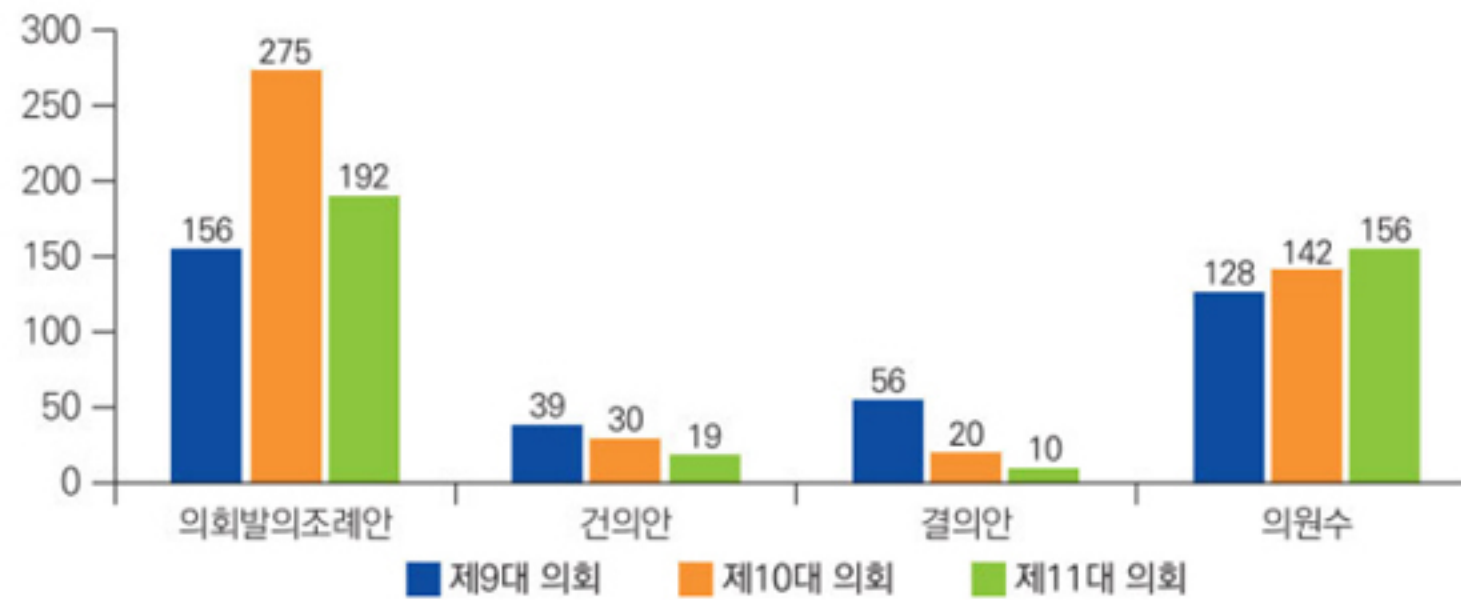
□ 분석결과

- 1) 광역의회
 - 광역의회는 17곳의 광역의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림1] 서울특별시의회 대수별 자발적 의정활동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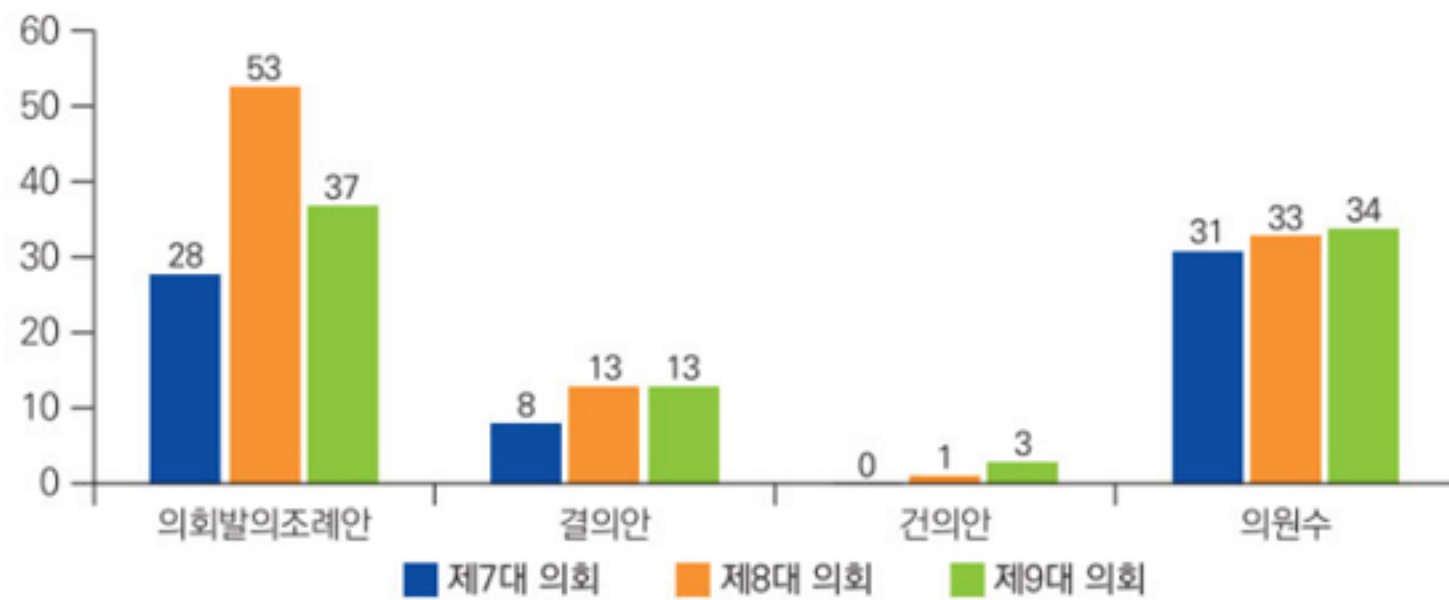
• [그림2] 경기도의회 대수별 자발적 의정활동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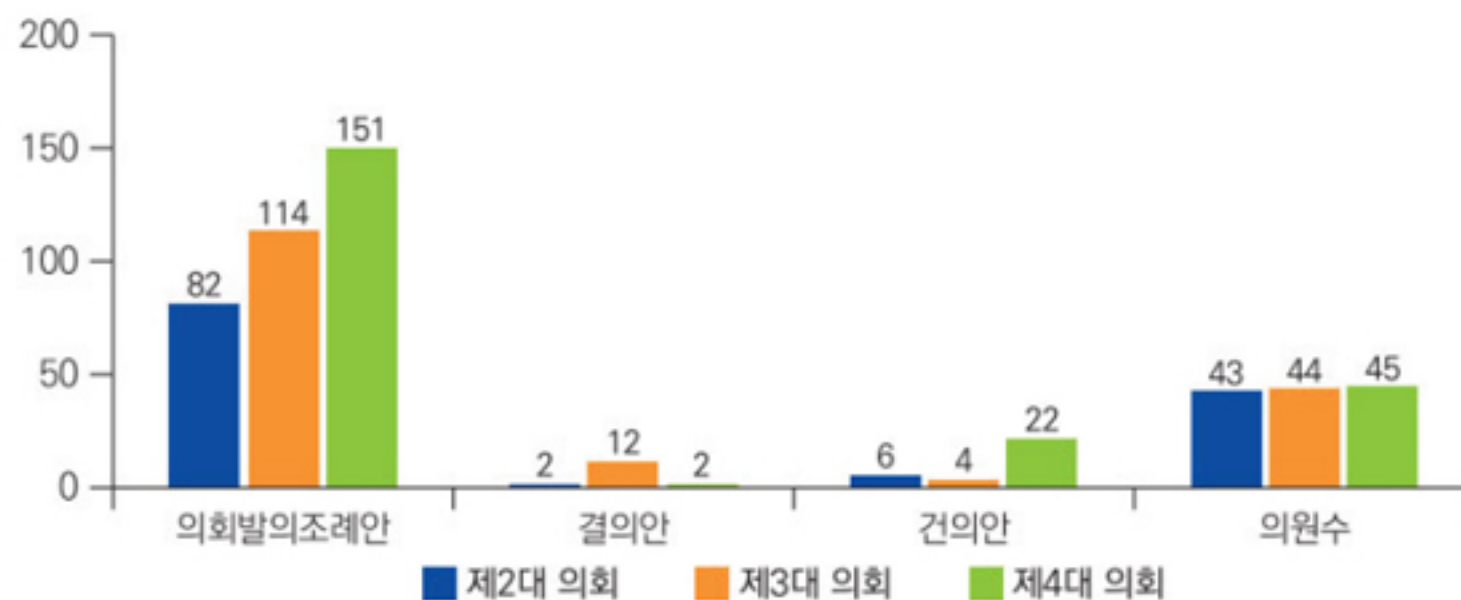
• 2) 기초의회

-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4곳(고양, 창원, 용인, 수원)이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바, 이 중 수도권의 고양특례시의회와 경남지역의 창원특례시의회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 [그림3] 고양특례시의회 대수별 자발적 의정활동 비교 •



• [그림4] 창원특례시의회 대수별 자발적 의정활동 비교 •



□ 분석 결과 및 함의

• 1) 광역의회

- 광역의회는 분석 대상인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을 전후하여 의회의 의안처리 상황으로 볼 때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오히려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서울과 경기도의 제9대 의회와 제10대 의회 사이에 의회의 입법활동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제 10대 의회와 양 제도가 의회에 도입된 제 11대의회와는 별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여러가지 점에서 항의하고 있는바, 첫째,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었다고 해서 조직이 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에 맞게 확대 조정되지 않은 점이 있음.
- 여러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규칙의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정하였더라도 피상적으로 자치단체 정원 중 극히 일부를 의회 사무기구 정원으로 늘렸고 이중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위주로 늘려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둘째,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용하고 있는바, 의회의 특성상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직 요원들이 가능한 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나 인사 운용의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들과 전문직 공무원들이 승진요소 등을 감안하여 주도권 다툼 등이 나타나면서 개방형, 별정직,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사무기구의 직무분석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상임 위원회 및 사무처 정책지원부)의 수를 줄여가고 있음. 인사권 독립 전후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직종별 증감 상황을 분석하면 [표-2]와 같음

• [표2]인사권 독립 전후의 서울특별시 사무처 공무원의 직종별 증감 상황 •

구 분		2021년 8월	2023년 6월	비 고
정 원	계	356	374	+18
	일반직	216	245	+29
	별정직	9	9	-
	개방형/임기제	131	120	-11
정책지원관		55(시간선택제)	56	+1

- 비교 대상 시점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을 비교하면 정책지원관을 제외하고 전체 정원이 총 18명 증가했음.
- 하지만 일반직 정원이 29명 증가하는 동안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11명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 4급 직위의 경우 과거보다 2개 직위(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가 순증했으며 과거 개방형으로 보임했던 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 직위와 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 2개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은 4개 직위가 순증한 반면, 개방형 임기제 직위는 2개가 감소함.
-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6, 7급 입법조사관 직위 가운데 인사권 독립 이전에는 전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으나, 현재 5개 위원회(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보건복지, 예결특위)에 8개 직위에 일반직 입법조사관을 발령해 임기제가 감소하였음.

- 셋째,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개인별 전문성 격차가 심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임용 시 학력과 경력을 위주로 임용한다고 하나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여 모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는 실정임.
- 넷째,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수가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하는 현재의 제도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할 수 있음. 만약 1명의 정책지원관이 당선 횟수가 다른 의원이나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이나 성별이 다른 의원들을 지원하게 된다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예를 들면 지원하는 의원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같은 사실으 정책지원관 한 사람이 다르게 검토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됨.
- 다섯째, 앞서서도 분석하였다시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종 등을 바탕으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의원 및 다수당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소신 있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할 수 없게 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2) 기초의회

- 기초의회는 분석 대상인 고양특별시의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을 전후하여 의회의 의안처리 상황으로 볼 때 큰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창원특별시의회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4대 의회에서 의안의 처리 통계로 본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졌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의원들의 소속 정당 구조도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작동되고 있지 않나 하는 추론을 가능케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모두 적용되는 것을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 구성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에서 고양특별시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초의회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된 현재까지도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단체장 제출 우위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활동 지원이 의회 사무기구를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기초의회도 광역의회에서 분석한 함의와 유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기초의회 정책지원전문 인력으로 임용되서 활동한 후 광역의회로 옮기는 사례가 빈발하여 정책지원관 임용이 우려된다는 기초의회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0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항수 개선과제

- 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기준인건비제, 조직권, 예산편성 요구권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②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원을 의원과 1대1 매칭으로 보완이 필요함.
-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업무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형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자율화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④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내 국회의 사례와 유사한 정당별 정책연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요청됨.
- ⑤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 및 역할에 확장에 따른 현행 의정활동비 등 지원비용의 현실화가 요청됨.

출처 :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알기쉬운 정책용어



국민비서란 무엇일까요?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저 국민비서 구베는 국민들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저 구베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선제적인 알림 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저 구뵘!**

✓ **이용통의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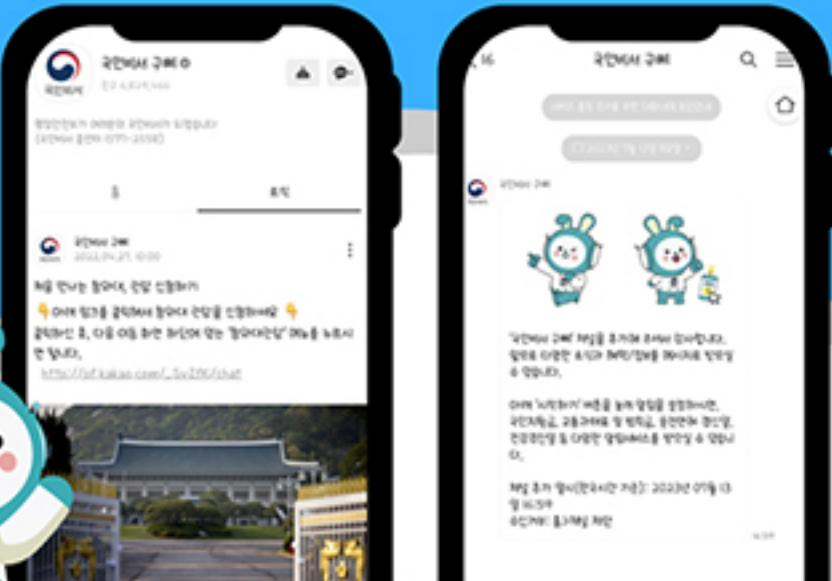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받기 설명서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국민비서 페이지에서 알림형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상담서비스 받기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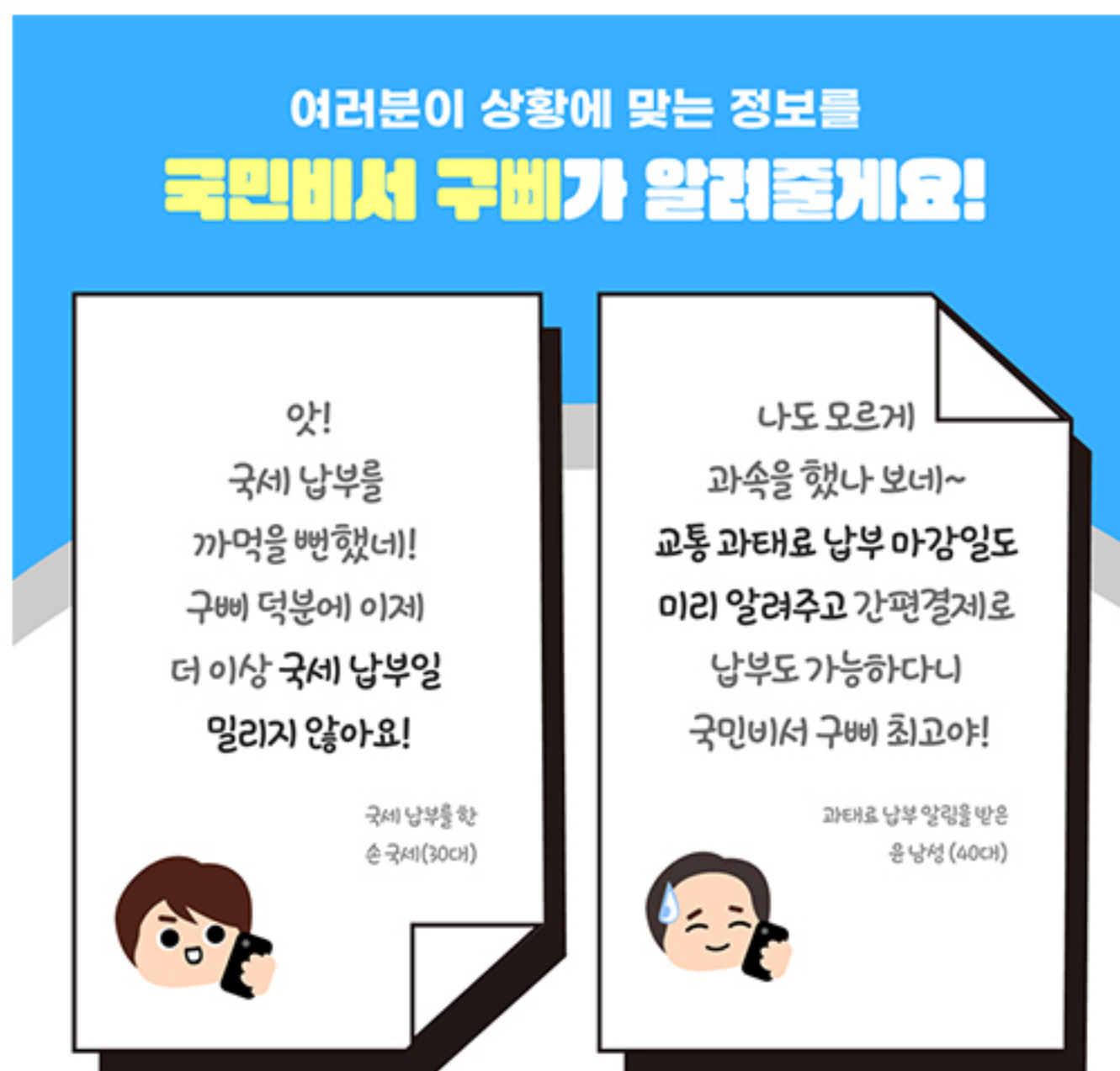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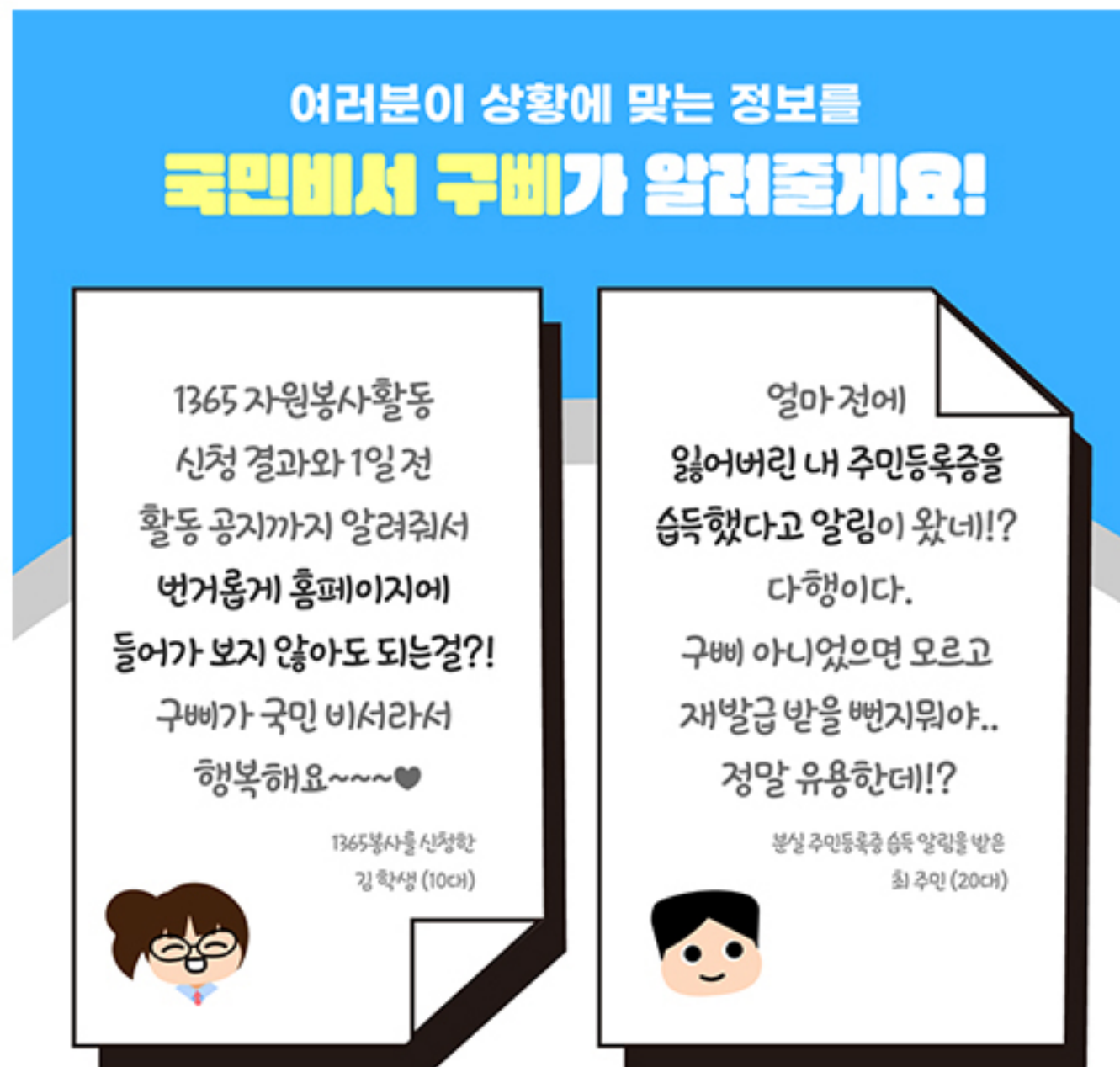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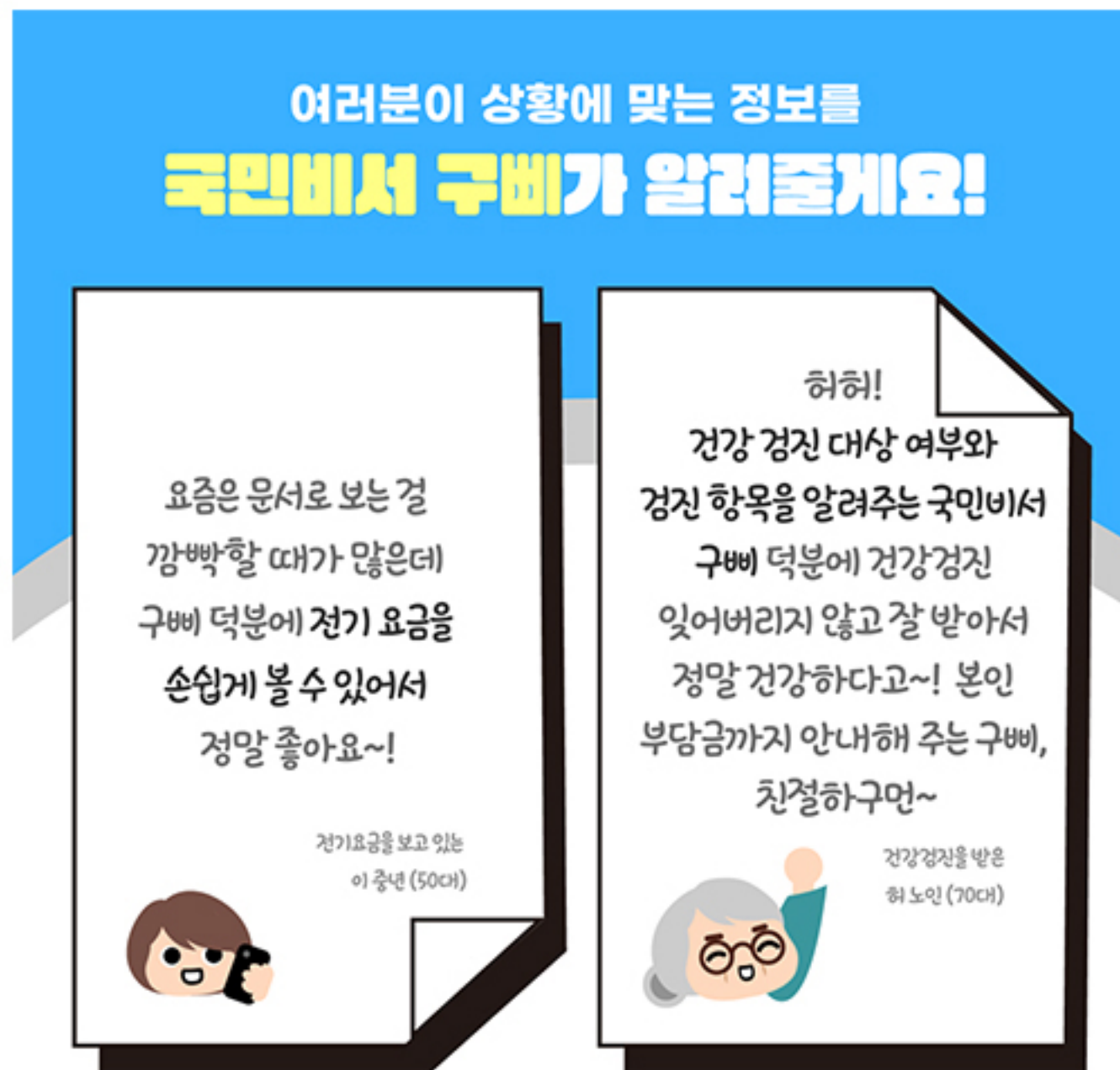
정부의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민비서 구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챗봇에게 편하게 메시지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편하겠죠?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